2011. 3. 28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바레인 반정부 시위의 진행 현황과 전망

1. 바레인 개요

○ 인구: 72만 명 (외국인 포함 130만 명)

○ 면적: 665km^2 (우리나라 강화도 크기)

○ 종교: 이슬람교(81.2%), 기독교(9%), 기타(9.8%)

○ 알칼리파 가문(Al-Khalifa clan)이 1783년 페르시아를 축출한 이래 200년 이상 바레인 통치

-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알칼리파 가문의 왕정이 지속되어 왔으며, GCC[1] 국가 중 수니파 왕조가 다수의 시아파를 통치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

○ 2002년 정치 개혁을 통해 입헌군주제 도입[2]

- 국왕: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Hamad bin Isa al-Khalifa), 1999년 즉위

- 왕세자: 세이크 살만 빈 하마드 알칼리파(Sheikh Salman bin Hamad al-Khalifa)

1)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로, 2009년 기준 세계 원유 매장량의 37%,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2)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체제 전환을 선포하고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

- 양원제: 자문회의 40석(국왕 임명), 대표회의 40석(선거로 선출, 하원에 해당)[3]

○ 산업구조: 금융업 25%, 석유산업 25%[4], 제조업 13% 등

○ 대외관계: GCC 회원국 및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우호 관계 유지

- 경제적 안정 및 치안을 주변 GCC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GCC 최대 경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경제·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5]

- 바레인에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와도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2. 시위사태의 배경

□ 전체 인구 중 70%가 시아파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니파가 정치, 경제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시아파는 주로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어 종교적 긴장이 지속되어 왔음.

□ 15%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일자리와 주택의 부족, 외국인 수니파에 대한 귀화 조치[6] 등에 대한 불만도 잠재되어 왔음.

□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성공의 영향으로 알 칼리파 가문의 권력 독점 구도 혁파와 시아파에 대한 각종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로 표출

---

3) 2010년 10월 대표회의 선거에서 바레인 최대의 시아파 정당인 이슬람국가협의회(Islamic National Accord Association: INAA)가 총 40석 중 18석을 획득하였으며, 최근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음.

4) 바레인은 원유 매장량이 3억 배럴로 추정되나 15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금융업 육성 등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왔음.

5) 대부분의 바레인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있는 유전지대에서 생산되며, 양국을 연결하는 25km의 교량은 바레인이 아라비아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육상통로임.

6) 소수인 수니파가 수니파 국민 수를 확대하기 위해 아랍 각국과 파키스탄의 수니파 주민들을 바레인 국민으로 귀화시켜 옴에 따라 시아파의 불만을 초래함.

○ 시위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아파 정당 간에 이견이 있음. 강경 시아파인 하크당(Haq)은 수니파 왕정의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온건 시아파 정당인 INAA는 현 왕정은 유지하되 의회에 더 많은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사태 진행경과

○ '11. 2. 14 수도 마나마(Manama)에서 '분노의 날(Day of Rage)'로 명명된 대규모 시위사태 발생.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대 3명 사망

○ '11. 2. 17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4명 사망

○ '11. 2. 19 강경진압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려를 표명하자 정부가 집회를 허용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제안하면서 폭력 사태 진정

○ '11. 2. 24 정부는 정치범 300여 명 석방, 가구당 2,650달러의 현금 지급, 식료품 보조금 7.7% 확대 등 정치·경제적 유화책을 발표

○ '11. 3. 11 정부 지지자와 시위대 간 충돌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총으로 시위대 강제 해산

○ '11. 3. 13 무장한 수니파 경찰과 수적으로 우세한 시아파 시위대의 대치로 시위가 격화되면서 200여 명 부상

○ '11. 3. 14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명, UAE가 500명의 병력 파견

○ '11. 3. 15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7], 이란 정부는 바레인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 발표

---

7) 시위대가 외국 군대의 주둔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면서 정부군과의 충돌이 심화되자 정부는 3개월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4. 전망

□ 정치개혁은 불가피한 상황

○ 바레인 시위 사태는 정치적 억압, 시위 강경 진압, 경제적 유화책 제시만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정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바레인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군대 파병 및 GCC의 100억 달러 지원 등 주변 GCC 회원국의 지원을 고려할 때, 시위 사태가 왕정 교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수니파와 시아파 간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잠재

○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바레인 파병에 대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이라크 등이 반발하고 있고 이란의 바레인 시아파 배후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바레인 국왕은 반정부 시위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였으며, 시위를 지지하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시아파 국가에 대한 항공노선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음.

○ 시아파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과 이에 대한 시아파의 거친 저항으로 더 큰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란의 개입으로 인해 내전 상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위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 높아

○ 시아파의 요구사항이 알 칼리파 가문의 권력독점 혁파, 신헌법 제정 및 총리 선출제 도입, 시아파에 대한 차별 철폐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소요 사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유혈사태의 지속 및 확대 시에는 사우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시아파 주민들이 시위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어, 사태의 진행 추이에 따라서는 소요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시아파에 대한 차별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전 국민의 약 10%로 추산되는 시아파 주민은 동부의 주요 유전지대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들은 병역 의무가 없고, 정치·외교 분야의 공직 참여나 여행·거주의 제한 등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우디 왕정의 전복을 노리는 알-카에다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과거부터 사우디 정부는 시아파 국민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고, 특히 1979년의 이란 회교혁명 후에 시아파 밀집지역에서 다수의 폭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 예상

○ 금융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위 격화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이 투자자금 이탈 및 금융기관의 주변 걸프국으로의 소재지 이전,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경제성장률은 시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5%대로 예상되었으나, 이후에는 1~2%대 수준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성장률 둔화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시위 사태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확대 등 경제 유화책 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대외채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Fitch는 시위 격화, 외국군 개입,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정치·사회적 혼란 심화를 반영하여 바레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하향조정하고,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바레인 국가신용등급 변경 추이

· S&P: A (2006년 4월) → A- (2011년 2월) → BBB (2011년 3월)

· Fitch: A (2010년 12월) → A- (2011년 3월) → BBB (2011년 3월)

· Moody's: A2 (2007년 7월) → A3 (2010년 8월)[8)]

- 바레인의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CDS 스프레드도 시위 발생 이전인 2010년 12월 말에 180bps 내외였으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2011년 3월 15일에는 350bps로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책임심사역 박대원(☎02-3779-5723)
E-mail : parkdw@koreaexim.go.kr

8) Moody's는 2011년 2월 23일 바레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위한 평가작업에 착수하였으며, 3개월 내에 평가를 완료할 것임을 발표함.